

쏟아지는 정치 폐현수막...재활용 방안은 '막막'

장바구니·앞치마 등으로 재탄생해도 활용도 낮아 애물단지로 광주 폐현수막 매년 600여t 폐기...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필요

국민의 대표를 뽑는 22대 총선이 끝나고 광주·전남 곳곳에 걸렸던 정치현수막들이 '골칫덩이'로 남았다.

광주·전남에서 수거된 폐현수막의 대부분은 소각처리돼 온실가스와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일부는 마대자루, 예코백 등으로 재활용하지만 수요가 없어 재활용률은 극히 미비하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4 총선 기간(3월 28일~4월 9일) 광주·전남에 게시된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광주 854매, 전남 2084매에 달한다. 여기에 선관위가 투표 안내를 위해 게시한 현수막도 광주 454매, 전남 1402매에 달한다.

최근 3년간 광주 자치구에 걸린 뒤 폐기를 처리된 현수막은 2021년 629t, 2022년 720t, 2023년 682t에 달한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현수막을 재활용할 방안을 찾지 않고 모두 불에 태우는 '소각' 방식으로 단순 처리하고 있다.

현수막의 경우 대부분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각하면 이산화탄소와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이 나오며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매립할 경우 플라스틱 성분으로 인해 몇백 년 뒤 분해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지자체들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를 대안으로 내고 있지만, 제작 단가가 2배 이상 비싸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수막 홍보는싼 가격에 다양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선호되지만 가격이 2배 이상 비싸진다면 현수막 제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

다.

이에 광주 5개 지자체와 환경단체들은 폐현수막 재활용 논의를 지속해왔다. 재활용은 예코백과 마대자루 제작 등으로 되지만 재활용률이 극히 저조한게 현실이다.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에서 재활용된 현수막은 3t에 불과하다.

광주북구일터 재활센터는 2020년부터 광주 북구로부터 1500만원을 지원 받아 '폐 현수막 리사이클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구 청소행정과에서 현수막을 센터에 제공하면 앞치마, 장바구니 등으로 만들어 납품한다. 이 중 상태가 좋지 않은 현수막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밧줄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남도 푸른바다 큰물고기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시민단체 1088명이 참여해 폐 현수막을 이용해 해양 쓰레기 수거용 자루 1090개를 만들어 해변가에서 환경 정비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재활용된 물건들은 인기가 없어 판매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장바구니나 앞치마 등으로 사용할 경우 후보자와 특정 정당의 이름이 쓰여있고 촉각도 거칠어 일상에서 사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재활용으로 만들어져도 쓰레기로 버려지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퀄리티'를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수막 자체의 질이 낮다보니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17일 오후 광주시 북구 신안동 광주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내 예코그린 사업장에서 폐 현수막을 재활용해 장바구니를 만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다만 외관과 무관하게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밧줄 등의 물건을 만드는 것도 폐현수막을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며 "무엇보다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현수막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제작을 자제하고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홍보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사건 인사이트

혀 내두르게 하는 비위...경찰인가 브로커인가

피의자에 뇌물 수수하고 사건 진행 경과 등 비밀 알려줘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경찰관의 비위가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17일 뇌물수수, 횡령,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0)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90만원도 부과했다.

나주경찰에서 근무하다 파면된 A씨는 지난 2020년 6명의 범죄 피의자에게 뇌물 또는 차용 명목으로 8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청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2월에 강제추행죄로 피소된 피의자에게 피해자와 적정한 합의 금액 등을 자세히 알려주고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A씨는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며칠 앞두고 있는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는 강제추행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의자에게 '여자를 추행하는 사건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전화와 받고 피의자가 도주한 사실을 알고도 동료 경찰에게 알려거나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보호센터로 데려다 줄 때까지 여러 차례 피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건의 진행 경과와 처리 내용 등을 알려주기까지 했다.

상해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음에도 A씨는 수차례 피해자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합의할 때까지 사건을 지연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A씨는 "금원을 요구한 사실은 있지만 차용금일 뿐이고 직무와 관련해서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대가로 받은 뇌물이 아니다"면서 "범죄 사실 기재된 내용 중에 일부를 알려준 사실은 있지만, 공무상 비밀로서 가치가 없는 내용만 알려줬고, 도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으로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며 도피하게 하는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뇌물 공여자와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돈 받았지만 대가성 없었다” 최영환 전 시의원 혐의 부인

광주지법서 뇌물수수 혐의 재판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환(40) 전 광주시의회이 뇌물혐의를 부인했다.

17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 심리로 최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이 최 전의원에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공무상비밀 누설·범죄수익은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이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지난 2020년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유치원을 대상으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재판에 넘겼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사실 유치원을 시교육청이 사들이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또 사업 시행 전 공모 일정·평가 항목 등을 해당 유치원 원장에게 알려줬고, 평가가 끝난 후에도 각

유치원이 항목에 따라 받은 점수·결과를 발표 전 유출한 혐의와 또 다른 유치원 원장에게도 사업 대상 선정을 약속하고 30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공소사실로 제기됐다.

최 전 의원은 이날 다른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특가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약속 혐의는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다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재판에서 최 전 의원에 6000여 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치원 원장을 증인요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한편 최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아 2022년 6월 필리핀으로 도주해 1년 7개월 후 자수의사를 받고 귀국했다. 최 전 의원과 관련해 유치원 원장, 언론인, 교육청 공무원 등 5명은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

고교생 제자 상대 성범죄

전남 모 고교 교사 체포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남지역 고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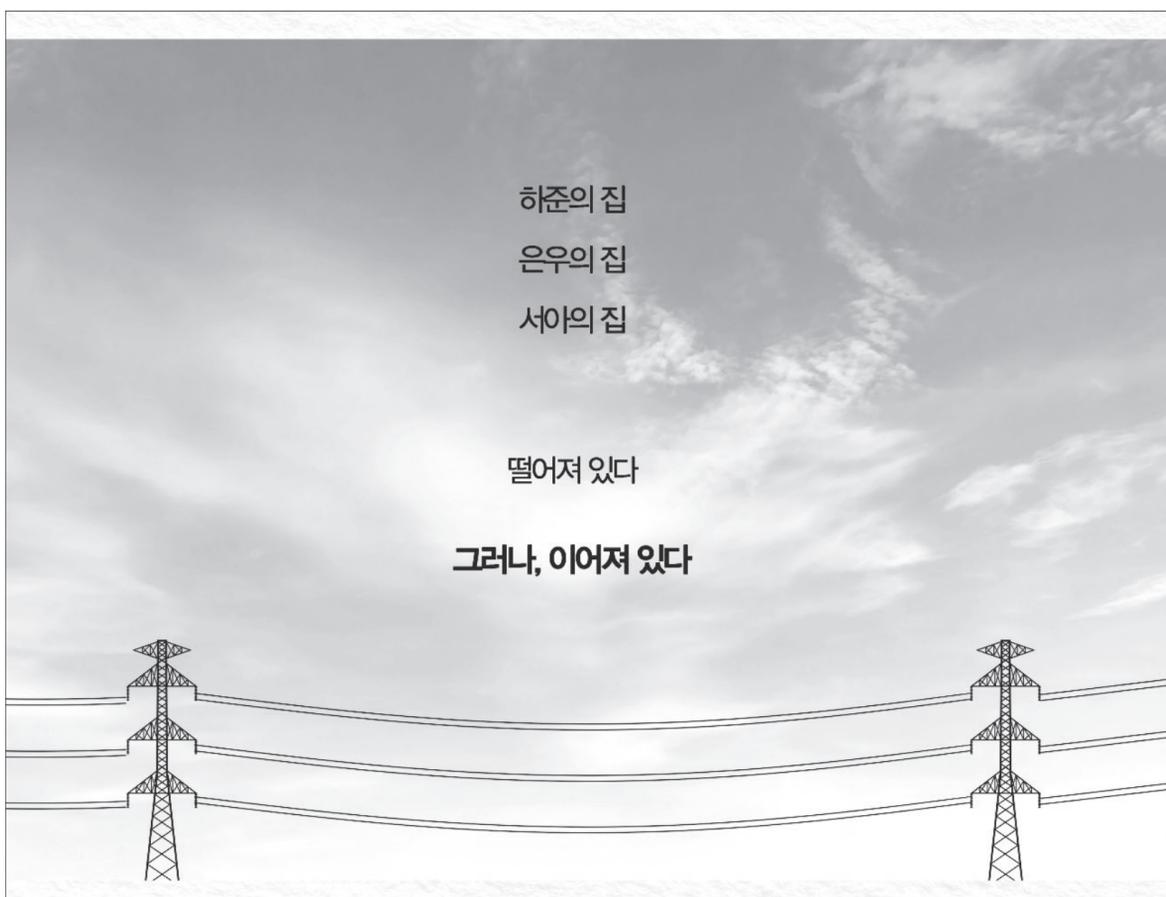
30대인 A씨는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를 통해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하준의 집
은우의 집
서아의 집

떨어져 있다

그러나, 이어져 있다

연결. 전력망 으로부터 시작

전기가 있어 우리의 일상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의 소중한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이 내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이 전력망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전력망 확대는 모두의 내일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 정전발생률 감소 • 저탄소 에너지 확대 • 에너지요금 안정화 •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